

오피니언

다산포럼

염재호



얼마 전 법학전문대학원에 가겠다고 준비하는 학생을 만났다. 혹시 변호사가 되면 안정된 직업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사회적 약자들 톱기 위해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그 일을 위해 변호사가 되는 걸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다고 한다. 요즘 아이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기뻤다.

그런데 요즘은 무얼 하느냐고 물었더니 작년에도 한번 도전했는데 실패해서 지금 입학준비를 위해 영어학원에 다닌다는 것이다. 학교 성적은 평균 4.0이 넘고, 토익 점수도 900점 정도였다. 법학적성시험인 LEET 점수도 웬만해 받았는데 작년에 실패한 것은 아무래도 토익 점수가 조금 모자라는 분석이었다. 토익에서 대여섯 문제를 더 맞추어야 학점권에 들어갈 것 같기에 한 달에 30만원씩 주고 유학과 전문 족집게 강사가 강의하는 학원에 세달 정도 다녔다고 한다.

그리면 그곳에서는 무엇을 배우냐고 했더니 영어실력이 아니라 출제의도를 파악해서 답을 정확히 맞추는 요령을 배운다고

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성적이 40점에서 50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에 약 200만 정도의 학생들이 매일 수업을 듣는다고 한다. 학원과 강사는 한 반에서만 한 달에 60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셈이다.

영어, 그 정도면 됐다

공정한 입시를 위해 점수화된 평가방법이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국내 변호사를 육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자격에서 토익 점수로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난센스다. 토플시험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생활영어에 대한 시험이며 일본에서 생활영어에 대한 시험으로 토플시험 출제 기관인 ETS에 의해 해서 만든 시험이 토익이다.

이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대학졸업, 취업, 심지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까지 활용되고 있으나 그 상품성은 대단하다. 그러기

에 최근에는 국립대학과 언론사가 협력하여 유사한 시험을 만들어 상업화 대열에 끌어들었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되면서 영어의 필요성은 증대되었다. 십여 년 전 고려대학교의 영어 강의 의무화 정책에 참여했던 필자도 당시에는 학생들이 영어로 이해 풀어 후 너무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이 정책에 찬성했다. 마치 1970년대 경제성장을 위해 내수시장도 미약했지만 수출지향 산업정책을 추진했던 것 같은 극약처방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영어의 열풍은 지나쳤다.

유치원부터 영어학원에 다니고 미국 학부 유학생이 7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외무고시뿐 아니라 BK 후속사업으로 국내 대학원 박사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 Ph.D. 사업에도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면접하도록 한다. 국제화된 인재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학부의 해외유학을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최근 외교통상부의 한-EU FTA 국회비준 과정에서 한글 오역문제로 시끄러웠다. 정부가 제출한 오역 207건을 들여다 보면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한국어를 몰라서 틀린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공무원시험을 성인고시로 번역한 것은 아무리 영어를 잘 해도 한국 사정을 이렇게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듦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그 정도면 됐다. 오히려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할지 모른다. 토익 점수 몇 점 더 받고, 의미 없는 자격증 때문에 대학생들이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은 막아야 한다. 기성 세대의 무지와 아집으로 학생들만 맹들어가는 건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고려대 행정학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GO 칼럼



노인숙

북한 이탈주민들 성공 정착 하려면

경제적 문제 등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인 질병과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전혀 다른 체제와 환경 속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제 북한이탈주민들은 엄연한 우리 사회의 한 일원이 되었으나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다. 이는 정부에서만 관심을 가질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이 한국인으로 꿈을 성취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해야 한다.

특히 1990년대 들어오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분단시대의 한국사회를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한 것은 본격적인 통일에 앞서 민족통합을 미리 준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좋은 기회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급증한 아래 정부의 획

일적인 노력만으로 효과적인 통합을 기대하기 어려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가 구축됐고 민간단체들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진정 남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 취업, 교육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빠른 정착을 위한 지원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에서 단지 복지지원의 수혜대상, 취약계층이라는 인식을 넘어선, 이들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 한 구성원이며, 향후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야 할 종자대한 과제다.

지난 4월 21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광주새터민건강복지센터는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맞춤형 지역 적응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차 권역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과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역적응 활성화 방안'의 주제 발표에 이어 지역사회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략 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을 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 전문가간 활발한 토론을 하였으며, 이런 기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이 보다 쉬워지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이 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보다 빠르고 적정으로 정착할 수 있고, 한국사회와의 사회적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통일에 대한 밀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광주새터민건강복지센터장·대불대 교수〉

기고



박용수

고등학교 10시 하굣길을 바꾸자

과 후문의 도로주변에 병목현상이 유독 심하다. 학생들의 자율학습이 끝나기 때문에 마중 가는 차량, 귀가 중인 차량이 대부분이다.

차량은 2차선은 물론 심지어 4차선 광도 까지 나와서 통행을 막는다. 들고 나온 차량으로 한참을 기다려도 길이 끊이지 않는다. 설상가상 통학버스까지 길게 늘어서서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서 통학버스가 출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 혼잡과 지체가 계속되었다.

서로 배려하며 교통질서를 지키던 시절은 까마득한 옛날이고, 오직 내 자식만의 권리 위해 아무 곳에나 불법주차, 불법유턴, 불법통행을 서슴지 않는 학부모 차

랑과 서둘러 귀가하고자 도로로 질주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혼돈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10시 정각에 하교를 한다. 1~3학년 학생들이 일제히 후문으로 쏟아진다. 한 학년이 350여 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대략 1000여명의 학생들이 일시에 홍수처럼 도로로 쏟아지는 셈이다. 거기다 납학교와 여학교가 인접해 있는 학교에서는 무려 2000여 명의 학생이 동시에 귀길을 촉촉한다.

여전사고의 위험도 높고, 귀가도 늦어지는 무질서 현장이 되고 만 것이다.

10시면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운행하는 시간이다. 항상 적자에 시달린다는 시내버스

스, 그런데 정작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행되는 시내버스로 하교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

무엇보다 시내버스가 한꺼번에 하교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고, 그런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복잡하다는 이런 저런 이유로 시내버스를 피한다. 적자는 계속되고 시민들의 주머니는 더없이 가벼워진다.

시차를 두고 하교하면 어쩔까. 1학년은 8시, 2학년은 9시, 3학년은 10시 정도로 하교하면 많은 학생들이 굳이 시내버스보다 2배 이상이나 되는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시간대에 고등학교 앞 노선에 시내버스를 집중배치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삭막한 하굣길을 바꾸면, 그래서 학생들이 이 친구들과 도립도란 이야기하며 우정도 키우고, 정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주면 광주가 활짝 인정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수필가〉

10시, 학교에서 10시는 진정 어떤 시간이고 세상의 시간으로 또 몇 시일까. 오전 10시는 잠자는 시간이고 오후 10시는 끼어나고 하교하는 시간은 혹시 아닐까.

지인과 만나 헤어지는 시간이 10시 즈음이었다. 이 즈음 도로는 자동차들이 불길듯 불어난다. 물론 일반인들이 귀가를 재촉하는 막바지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교 주변, 거기에 정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노인 자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인구 가운데 60%가 자녀 없이 홀로 살아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양 문제를 가

족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사회가 나서 책임질 부분은 서둘러 나눠 가져야 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송명희 광주시 광산구 대산동

인간에게 있어서 출생이 선택이 아니듯 죽음 또한 선택이 될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무관심 속에 노인 자살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OECD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최근 5년 사이에 노인 자살이 3배나 늘었고, 노인 5명 중 1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노인들이 삶을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인 빈곤과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노인들에게 죽음은 삶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2-628/팩스 06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최근 청소년들의 자살이 급증하자 정부는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급속히 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관심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와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청소년 자살예방뿐 아니라 우울증 등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노인 자살문제는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심리 검사와 상담만으로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노인 자살 상담 전화

시설

빈 라덴 사망 테러리즘 종식 계기 돼야

세계를 경악시킨 2001년 9·11 테러의 배후 인물인 오사마 빈 라덴이 사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테러 조직 알 카에다에 이끌고 있는 빈 라덴이 1일(현지시간) 사살됐다고 발표해 그의 죽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9·11테러를 감행한 3천여 명의 무고한 인명을 숨기고 지구촌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았던 빈 라덴이 제거된 것은 테러리즘의 한 장(章)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이 10년 가까이 지속한 중동에서의 대테러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상징성을 확보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빈 라덴의 죽음을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빈 라덴의 죽음이 테러의 끝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는 알 카에다의 상징이었지만 분명 알 카에다 조직은 빈 라덴 개인 이상의 조직으로 테러의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기 말 개각, 이번 만은 '친정체제' 안 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완파한 한 데 이어 이번 재보선에서도 참패한 것은 '고소영'에서 선진국민연대로 이어지는 '끼리끼리 인사'와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인해 소통과 통합이 막히고 결과적으로 민심 이반을 불러온 게 아닌가.

이명박 정권 3년여 동안 인사와 재정 등 모든 면에서 영남·경주와 호남·제주가 노골적이다. 대세로 굳어진 사실을 누구든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 정부 장·차관급과 청와대 1차관·비서관 등 상황이다. 만일 이번 인사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다면 김형식 총리를 제외하고 내각에서 광주·전남 인맥은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각이 4·27 재보선 패배에 따라 국정쇄신의 뜻을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성지역 및 인맥을 중용하는 '친정체제' 구축은 오히려 민심의 반발을 부르는 등 레임덕 현상을 축발시킬 것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결코 전이 끝난 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기지를 만들자 빈 라덴과의 관계를 헤아렸다.

일부 과격 이슬람단체가 미군기지를 공격했고 이들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빈 라덴은 국적을 박탈당했다. 이후 그는 수단으로 옮겨가 미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테러전에 나섰다.

빈 라덴의 사망은 언뜻 미국의 큰 승리로 보인다. 그러나 10년을 끌어온 미국과 이슬람 테러조직과의 싸움이 완전 종식됐다고 보기에는 물을 표다. 이슬람 테러조직들은 지도자가 죽음을 맞이하면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 라덴의 사망은 미국이 또 다른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할 신호탄일지도 모른다.

/박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無等鼓

지난 10년간 미국 대 테러활동의 가장 큰 목표는 오사마 빈 라덴의 체포에 모여졌다. 그가 2001년 발생한 9·11테러를 주도한 알 카에다의 지도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9·11테러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벌어져 최소 2752명이 사망한 기록적인 사건이다. 제3국도 아닌 자신의 영토에서 벌어진 금찍한 테러의 배후를 응징하는데 '세계 경찰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이 험안이 됐을 수 있다.